

“육일기, 국민 무시...나치기 용인할 국가 어딴나”

민주, 윤 정부 외교 정책 난타
“오염수 시찰 결과 여야 검증”
대중 수출 위기 등 거센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육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난타했다. 유정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교두보 삼은 통한의 땅이요 침략의 거점이었던 부산에 육일기가 들어왔다”며 “아무리 역사 인식이 저열해도 이런 일에 윤석열 정부와 여당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답변은 더 가관으로, 일본 함정의 깃발이 육일기와 형태가 다르다며 육일기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과거 침략의 상징인 부산 앞바다에 (육일기) 들어온 것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일본이) 역사 문제도 인정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주장도 더 강화하는 상황에서 육일기를 달고 들어온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라며 “나치기를 독일 해군이 달고 다니는 걸 용인할 국가가 어디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중 수출 위기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과 우리 시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오염수 방류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대통령 실을 겨냥, “오염수 방류를 돕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애초 IAEA는 오염수 방류를 지원해달라는 일본 요청에 따라 분석에 나선 것으로, 중립성과 대표성, 객관성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철민 의원은 후쿠시마 정부 시찰단과 관련해 “일본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왔는지 규명돼야 한다”며 “무슨 숨길 게 있어 국민의힘만 시찰단 보고를 받나. 여야가 시찰 결과를 공동 검증하자”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참모 및 장관 모임인 ‘포럼 사의제’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위한 잠정 조치를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중 외교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미국, 유럽, 일본도 중국과 경제 협

력을 오히려 강화한다”며 “외교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부합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의부장도 “우리나라는 대중무역 최대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했다”며 “미중 패권 경쟁 당사자인 미국이 오히려 대중수출 1위를 차지한 역설은 국적이 외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척도인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한정 의원 역시 “전세계는 ‘디리싱킹’(de-risking·위험 제거)으로 대중 관계 리스크를 줄이는데, 한국만 엉뚱한 데로 간다”며 “죽어나가는 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MBC 압수수색 시도하는 경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오른쪽이) 30일 향의하는 노조 구성원들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며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 부결

여야 표 대결...최종 폐기
찬성 178명·반대 107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

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극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

“자문위, 한 달 내 의견달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민주당은 같은 달 17일에 김 의원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조속히 징계 관련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이런) 의견 제출이 되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해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는 한편, 김 의원이 다음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현 의원 역시 “윤리특위를 통해 (김 의원의 징계가) 빠르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징계 관련) 안건을 잘 정리해 신속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하되, 국민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이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을 담아 (안건 회부 관련 서류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 달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시찰단’ 오늘 결과 설명 기자회견

유국회 단장, 활동 내용 발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보고 온 정부 시찰단이 31일 시찰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시찰단 단장인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21~26일 5박 6일간 진행한 현장 시찰 관련 활동 결과를 31일 오전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운전제어실, 비상정지장치 등을 점검했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원자력 규제위원회(NRA)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시찰단은 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까지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산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